

광주·전남 소방관, 욕설·폭행에 멍든다

제63주년 소방의 날

광주·전남 소방관들이 소방 활동 중 폭언·폭행, 허위신고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전남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소방 활동 방해 사건은 총 48건으로 집계됐다. 소방기본법 제16조 2항에 따라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실제 처벌은 '숨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해당 기간 소방관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반면 29명은 벌금형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고,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사례도 13건에 달했다. 나머지는 무혐의·공소권 없음·내사 종결 등으로 분류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28건의 소방활동

5년간 소방활동 방해 사건 48건…실제 피해는 수백 건

징역형 2건뿐 ‘숨방망이 처벌’…다수 벌금·집행유예 등

방해 사건이 발생했으며, 벌금형 18건(총 7300만원), 집행유예 6건, 기소유예 1건이 확인됐다. 전남은 20건 가운데 벌금형 11건(총 4100만원), 집행유예 6건, 징역 2건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7월 광주 서구 금호동에서 의식을 잃은 주취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차 안에서 동승자가 “빨리 가지 않는다”며 대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지난해 10월에는 광주 북구 첨단지구 한 거리에서 구급 환자를 이송하던 119대원의 얼굴을 때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그는 구급대원을 목격하고 시비를 걸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명확히 드러난 신체적·언어적 폭력만 집계될 뿐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중 중 목부립이나 욕설을 ‘무의식적 행위였다’고 해명해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소방관들이 ‘괜히 문제를 키우지 않겠다’며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이런 보이지 않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건수는 수백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폭언·폭행 피해를 당한 소방관들의 심리적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현직 소방관은 “근무중 욕설과 폭력을 당하면 ‘이 일을 왜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든다”며 “사건 이후에도 불안감이 남아

광주·전남 소방활동 방해 사건

광주 28건	전남 20건
벌금형 18건	벌금형 11건
집행유예 6건	집행유예 6건
기소유예 1건	징역 2건

※ 최근 5년간(2020~2024년) 집계



근무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소방관의 출동을 방해하는 허위신고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광주 한 백화점과 중·고등학교 5곳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신고가 접수돼 소방 인력과 장비 등이 낭비됐다. 3월에는 50대 가정이 ‘자신들의 아들이 납치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법적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시민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강응일 호남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소방관 폭행이나 허위신고는 업무의 지연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수준을 넘어 현장대응력 저하와 정신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특히 폭발물 설치 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고위험 사안이기에 소방과 경찰 등은 공권력을 총 동원해 모든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수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제도적 보완과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해 강력한 제재를 하고 시민 스스로도 공공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임재용 인턴기자 djawodyd0318@

실종정보문자·제보, 조기 발견 ‘효과’

치매환자·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안전 확보 ‘도움’

실종자를 찾기 위해 광주·전남 경찰이 운영하는 ‘실종정보문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합쳐져 실종자 조기 발견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9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정보문자는 만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실종됐을 때 발송된다. 발송 조건은 보호자가 경보발령과 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대상자가 상습 기출 전력이 없으며,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

광주·전남 실종 사건 신고는 매년 수 천 건에 달하고 있다.

광주 지역의 경우 2022년 1472건(18세미만·아동 850건, 지적 장애인 등 216건, 치매환자 406건), 2023년 1462건(823건, 222건, 417건), 2024년 1708건(954건, 253건, 501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올해는 10월 기준 1334건(814건, 178건, 342건)에 달했다.

전남지역은 2022년 1302건, 2023년 1160건, 2024년 1076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10월까지 765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아동은 454명, 지적장애인 등 158명, 치매환자 153명으로 나타났다.

실종 신고가 늘면서 실종정보문자 발송도 증가했다. 광주에서는 2022년 68건에서 2023년 103건, 2024년 91건, 올해 10월까지 71건이 발송됐다.

전남에서는 2022년 64건, 2023년 67건, 2024년 69건, 올해 10월 74건이 전달됐다.

실종정보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실종자 발견에 큰 힘이 됐다. 2022년 36건(광주 22건·전남 14건), 2023년 78건(60건·18건), 2024년 55건(37건·18건), 올해 10월까지 24건(14건·10건)의 제보로 확인됐다.

안전제난문자로 발송된 메시지에는 실종자의 간략한 신상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문자 하단에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블로그 링크가 함께 제공된다.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실종자의 마지막 촬영 사진과 함께 연령, 발생일시, 인상착의, 담당 수사관 연락처 등 구체적인 정보가 게시돼 있다.

더욱이 실종정보문자는 실종자 구조를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청 확인 결과 실종정보문자 제도 시행 이후 실종자 발견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4시간 36분으로, 시행 전 34시간 대비 7.4배나 단축됐다.

광주청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 기준 치매 환자 발견 평균 시간은 4시간 50분, 아동 13시간, 지적·자폐성 장애인 27시간 30분이다.

광주 경찰 관계자는 “실종정보문자는 조기 발견의 핵심 수단”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실종 취약계층 보호에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꿈, 결: 나의 동네에서’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꿈, 결: 나의 동네에서 꿈을 그리다’를 진행,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

광주지검, 17억 상당 마약 밀수·유통 일당 검거

태국인 등 7명 구속기소…도피 일당 인터폴 수배요청

약 8만8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17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유통한 외국인 범죄조직이 검찰에 검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태국 등에서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8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유통 혐의로 적발했다.

검찰은 밀수책 A씨(30·태국) 등 7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본국으로 도피한 B씨(32)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께 태국에서 국제 특급우편(EEMS)을 통해 시가 2372만원 상당의 마약 ‘아바’ 1186정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외국인 근로자

들은 A씨에게서 마약을 매수·유통하거나 직접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검은 또 광주세관과의 공조를 통해 베트남·태국인 사이에서 유통되던 케타민·아바 밀수범 2명을 추가로 검거,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약 5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의자 주거지와 은신처를 수색해 아바 5만6784정(시가 11억3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송치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파악하지 못한 마약 유통 사범을 추가로 검거했다. 단속 필로폰 매수 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을 재수사해 필로폰 유통책 C씨(54·탈북자)를 구속기



케타민주 안에 은닉된 케타민

소했다.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처방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가 기소된 혐의로 송치된 약사 D씨(45)에 대해서는 재사수 끝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불송치 처분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마약 밀수·유통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을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2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사업가 징역 3년

광주고법 “조세정의 훼손 중대 범죄” 중형 선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를 포탈한 광주 사업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의의영 재판장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억원을,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8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광주 동구 한 회사에서 다른 공급업체들에 22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사건 관련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 또는 회유하며 자신의 조세 포탈 범죄를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50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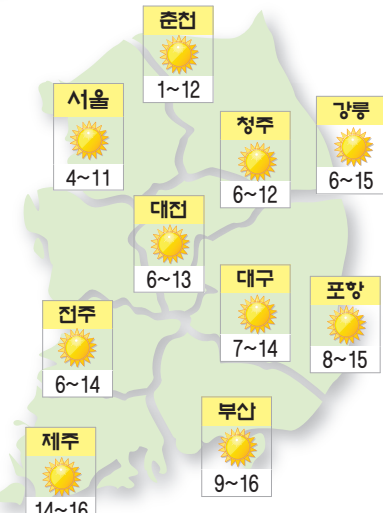
형소심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등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고 지적했다.

이러 “항소심에서까지 포탈한 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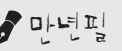
☀️	예보	07:02	달달	22:00
☀️	예보	17:30	달달	12:10



	광주	☀️	8~14
	목포	☀️	10~14
	여수	☀️	9~15
	순천	☀️	8~15
	구례	☀️	7~14
	광주	☀️	8~15
	임도	☀️	10~17
	목신도	☀️	12~15
	고흥	☀️	8~17
	진도	☀️	11~15

목포	밀물(고)	05:04 / 18:03
	썰물(저)	10:12 / 23:09
여수	밀물(고)	12:35 / --:--
	썰물(저)	05:45 / 18:43

위조 공문서 사기 ‘주의’



○·여수에서 위조 공문서를 활용한 물품 구매 사기 사건이 발생.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김밥집에 손님 찾아가 자신을 시청 문화예술과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김밥 300개를 주문. 이 손님은 ‘2025년 불꽃축제 설문조사 음료’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을 내밀며 음료수 대리 구매도 요청.

공문에는 불꽃축제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에게 제공할 음료 구입 예산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가짜 여수시장의 직인까지 찍혀 있었다.

김밥집 주인은 시에서 축제에 쓸 음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속아 음료수 구매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대량의 김밥 주문으로 소상공인을 현혹하고, 예산 처리를 약속한 뒤 대리 구매를 요청해 돈을 보내면 가로챈 것으로 판단.

여수시 관계자는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통해 시청 특정 부서 공무원을 사칭한 소상공인 대상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여수서 수렵활동 중 총기 발사

멧돼지 오인 70대 엽사 숨져

여수에서 멧돼지 퇴치 활동을 하던 70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여수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1시 18분께 여수시 둔덕동 한 야산에서 70대 A씨가 50대 B씨가 총에 맞았다. 총에 맞은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수렵 면허를 가지고 있던 A·B씨 등은 유해조수 퇴치 활동을 위해 여수한 파출소에서 엽총을 출고해 사고 당시 멧돼지를 잡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쏜 것으로 보고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